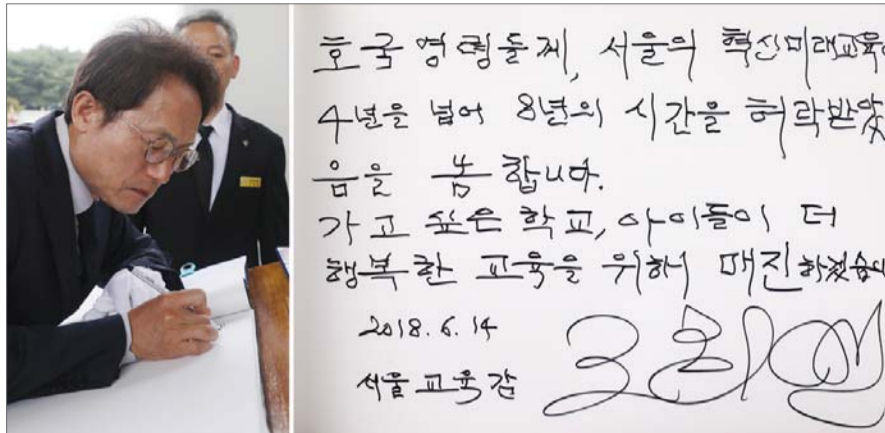


조희연 “서울, 혁신교육 4년 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선 성공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압박
학교 간 영어교육 격차 해소 강조



당선후 첫 행보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화와 분향후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조희연표 혁신교육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뜨거운 감자인 외고·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통한 폐지 압박이 거세지고, 초3 이후부터 영어교육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14일 오전 재선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4년 이후 제가 서울교육가족들과 함께 추진해 온 서울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의 4년은 좀 더 대담한 혁신을 위한 행보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조희연표 서울교육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외고·자사고’ 존폐 위기

서울 교육 정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재직 중은 물론 이번 선거 기간 중에도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

됐고, 일반고 황폐화와 고교서열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실제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중3 학생 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비를 보면 자율고(42만9000원), 특목고(46만6000원)가 일반고(27만원) 보다 월등히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자율고(76.3%), 특목고(79.4%)가 일반고(6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까지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사실상 폐지하려는 정책을 폈지만, 해당 학교 반발 여론에 밀린바 있다. 다만 올해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키로 해 사실상 일반고 전환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재선 성공에 따라 앞으로 4년 안에 특

목고 자사고 존폐 위기가 불가피해졌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도 일반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고입 동시 실시와 이중지원 금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년간 법률적 한계 등으로 자사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자사고·외고 선별효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동시전형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이루도록 향후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아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

초3 이후 영어 공교육은 강화된다. 조 교육감은 ‘초3부터 배워도 문제없는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추가 증원해 희망하는 공립학교에 전원 배치하고,

1 외고·자사고 폐지

2 영어 공교육 강화

3 전지역에 특수학교

영어 학습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들이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놀이 체험 중심의 영어수업 환경, 선행학습방지 강화, 방과 후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지역맞춤형 학습안전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발표한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학부모들의 우려와 지역·학교 간 영어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전지역에 특수학교 설립

서울 전 지역에 특수학교 새로 들어선다. 서울 특수학교는 지난 2002년 경운학교 설립 이후 한 곳도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이 필요한 서울지역 장애학생은 약 1만2800명이다. 이중 34.8%(4457명)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는 특수학교에 빈자리가 없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조 교육감은 재임 중 내년 3월 강서구 서진초, 서초구 나래초가, 내후년엔 중랑구 동진초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영등

포구, 양천구, 금천구 등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반발에 대응해 주민 편의시설이 있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와 지역 밀착형 소규모 학교로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2021년까지 특수교육실무사를 지속 충원한다.

이밖에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합법화와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조전임자 휴직허가도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도 자율권이 있다고 생각해 전향적 조치를 취했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용 의지를 드러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수능평가방식은 학생들의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경쟁과 서열화, 선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부산대 금융대학원’ 첫 신입생 모집

부산대학교는 금융대학원이 오는 2학기부터 파생금융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1기 신입생 25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 ‘부산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기존 대학원 과정과 차별화된 금융대학원을 신설하고 이번에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금융대학원은 파생금융에 집중해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빅데이

터 분석과 핀테크를 교육방향으로 설정했다.

금융수학, 고급경제학, 재무관리 등은 공통 필수 과목으로, 핀테크, 파생금융, 구조화금융 등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

교육 목적에 최적화된 첨단강의실, 금융실습실, 금융정보실, 금융라운지 등 교육 인프라를 갖췄고, 해외연수 지원, 성적 우수자 장학금, 특별장학금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을 마련했다.

승실대 오늘 제13회 박물관 아카데미 개최

승실대(총장 황준성)는 한국기독교박물관이 15일 오후 12시 교내 환경직기념관 송덕김덕윤예배실에서 ‘제13회 박물관 문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문화아카데미에서는 부산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김기혁 교수가 ‘평양, 승실의 옛 공간’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승실이 출범했던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평양

도시 구조의 변화를 근대지도로 통해 살펴보고 광복 이후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결과 현재의 변모한 평양도시와 건축물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기혁 교수는 한국고지도연구회 초대 회장과 문화역사지리학회장을 지냈으며, ‘한국지명유래집-남북한편’·‘한국고지도집-국토의 표상’ 편찬위원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학생들이 ‘우산되는 가방’ 업사이클 사업화 지원

건국대 학생들이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우산이 되는 가방을 만들었다. 대학 측은 관련 스타트업 도움으로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국대(총장 민상기)는 지난 11일 교내 학생회관에서 제1회 스타트업사이클링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업사이클(upcycle)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제품을 다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뜻한다.

건국대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을 시제품으로 만들고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논술전형, 수능 최저·논술만 ‘100%’ 선발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② 연세대

올해 특기자전형·논술전형 축소

학종 확대 ‘수능최저학력’ 적용



김명찬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

연세대는 올해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을 축소하는 대신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활동우수형, 면접형, 기회균형으로 세분되는데 활동우수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인 635명을 선발한다. 활동우수형은 1단계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국어, 수학, 탐구1, 탐구2 중 2과목 등급 합 4와 영어 2등급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전년도 내신기준 합격선은 인문계열

40%, 면접 6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에서는 교과 50%, 비교과 50%로 학생부를 평가하는데, 교과성적은 정량평가, 비교과는 정성평가 방식을 적용하므로 교과성적의 영향력이 활동우수형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년도 내신기준 합격선은 인문계열 1.35등급, 자연계열 1.31등급, 의예·치의예 1.05등급이었다.

논술전형은 전년 대비 40명이 감소한 643명을 선발한다. 아주 높은 수준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데,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탐구1, 탐구2 4과목 등급 합 7 및 영어 2등급, 자연계열은 4과목 등급 합 8 및 영어 2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학생부 반영을 폐지하고 논술 100%로 합격자를 선발하므로 내신성적 기준 합격선은 전년 대비 하락할 수 있다.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논술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내신성적이 저조한 학생도 합격이 가능하다.

‘학생부 개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본격화

대입 전형에 활용되는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일정이 본격 시작된다.

교육부는 15일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열린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 숙의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오는 29일에는 2차 열린토론회가 열린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1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정책참여단은 2차례의 상호 학습과 대면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열린토론회 결과와 온-오프라인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8일까지 학생부 개선에 관한 권고안을 도출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과 운영방안 안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에 대한 설명,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인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사전 예약 절차 없이도 일반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운영 과정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